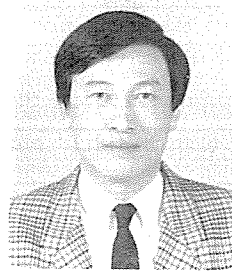


현 종합과학기술력 세계 14위 21세기 초 「G7」수준 진입 목표

50년대 근대과학기술 불모상태

한국은 광복 당시의 근대 과학기술의 불모지로부터 지난 50년간 전개된 적극적인 과학기술정책과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현대적인 과학기술부문(S&T community)이 주요한 사회제도(social institution)의 하나로 등장하면서 그 정체성(identity)을 확립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의 각 연구개발주체인 기업,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능력이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크게 뒤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과학기술부문과 사회 경제부문간의 연계성이 심화되지 못한 문제점도 안고 있다.

정부는 광복 이후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을 통하여 국가재건을 하루바삐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추진된 주요 정책의 하나는 이공계 고등교육기관의 정비였으며, 이를 위해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행정조직으로 문교부에 과학교육국(1950년에 기술교육국으로 개편)이 생겨났다. 또 상공부 안에 광무국, 수산국, 전기국, 공업국이 설치되었으나 과학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는 행정조직이 이때까지 없었다. 한편 6. 25 동란



崔永洛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총괄연구실장〉

전까지는 대학을 제외하고는 당시의 유일한 종합공업연구기관인 중앙공업연구소 그리고 중앙지질광물연구소 등이 연구활동의 중심체였다.

한편 6. 25 동란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제도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대학에서의 과학기술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자체가 힘들어지게 되었으며, 차츰 자리를 잡아가던 학회활동도 오랜 침체상태에 빠져들었다.

결국 50년대 중반까지 한국의 과학기술계는 정책, 인력, 시설 등에서 거의 황무지 상태에 있었고, 다만 국방과학연구소가 일련의 연구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50년대 후반에는 국방과학연구소와 중앙공업연구소가 시험연구 차원에 머물렀지만 연구활동의

명맥을 이어갔다. 하지만 50년대 후반 원자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의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되어, 1959년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최초의 정부기구인 원자력원이 설립되었고, 또 최초의 현대식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소가 세워졌다.

이 외에도 이 시기에는 외국과 국제기구의 기술원조에 힘입어 외국기술자의 초빙 및 해외훈련을 위한 국내인력의 파견이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졌다. 또 1952년부터 한국인의 해외유학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1954년과 1955년에는 각각 1천명을 넘을 정도였고 이중 자연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1957년 이후는 해외유학의 요건을 대폭 강화하여 인원수가 격감). 그리고 50년대 중반이후부터 질적으로는 미흡하지만 양적으로 팽창한 이공계 대학의 확충, 그 실효성은 낮았지만 중요성이 강조되었던 초·중등 과학기술교육의 강화와 실업교육의 진흥 등이 이 시기의 특기할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광복 이후로부터 5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은 비록 체계적이지 못하였지만 황폐화된 과학기술개발체제를 정비하는 데 기여하였다.

60년대 산업기술개발 역점

6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은 우리나라의 공업화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산업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정부는 공업화 과정에서 차지하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게 인식하여 경제개발계획과 연계된 과학기술진흥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특히 선진 외국기술의 도입·소화·개량이 긴요함을 감안하여 인력개발, 기술개발, 기술협력에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교육정책적 차원을 넘어서는 과학기술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1년 과학기술전담 행정기구로서 경제계획원 내에 기술관리국을 설치하였다.

한편 정부는 집중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의 진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또 여러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관련 업무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67년 독립된 행정부처인 과학기술처를 탄생시켰다.

과학기술정책을 전담하게 된 과학기술처는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수단의 발굴과 각종 제도의 정립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선도하고 그 발전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다른 한편, 정부는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국내에서 직접 개발하기 위하여 현대적 계약연구기관의 효시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를 1966년 설립하였다. 이 연구소는 선진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을 소화·개량하여 국내 산업계에 전파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였다. 이 연구소는 특히 해

외의 우수한 한국인 과학기술자를 과격적인 대우로 유치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국내에서 현대적인 연구기관들이 계속 설립되는 데에 대표적인 모델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우수한 과학기술자들이 속속 국내에 유입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1967년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진흥법을 제정하였고 과학기술처가 발족한 4월 21일을 '과학의 날'로 정하고 1969년부터 이와 관련된 행사를 갖는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과 과학기술의 생활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과학기술 풍토조성 사업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한편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60년대부터 시작되었는 바, 이 시기에 이루어진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초의 인력개발계획인 제1차 인력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이 있으며, 또 1967년에 착수하여 1986년에 완성된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1967~1986)이 있다. 이 장기발전계획에서는 80년대 중반까지 자주기 기술 개발능력의 강화로 중진공업 국가군에서 최상의 수준에 도달함을 목표로 하였으며, 1986년도의 연구개발투자를 GNP의 2.5%선으로 끌어올리자는 지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종합적으로 6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은 선진 외국의 산업기술들을 국내에 이전시키는 데 기여하는 한편, 과학기술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7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인 중화학공업 육성에 의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의 개발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진흥 기반의 강화, 전략적 산업기술의 개발, 과학기술풍토의 조성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였다. 당시 국내 연구개발활동의 주체였던 정부산하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였으며, 또 민간기업들도 본격적으로 산업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눈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였다.

정부는 먼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과 종합계획, 그리고 관련 부처간의 업무조정을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을 범부처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정부는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 기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분야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1973), 한국표준연구소(1975), 기계금속시험연구소(1976), 선박연구소(1973), 전자기술연구소(1976), 전기기기시험연구소(1976), 통신기술연구소(1976), 화학연구소(1976), 해양개발연구소(1973), 종합에너지연구소(1977), 자원개발연구소(1976) 등이 그 예이며, 해외에서 유치된 과학자들이 이들 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정부는 산업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에 대한 이론과 응용력을 갖춘 고급과학기술 두뇌 양성을 목적으로 1971년 한국과학원(KAIS)을 설립하여 우수한 국내의 인재들을 양성 배출하였는 바, 이들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에 진출하여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경제규모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산업계의 과학기술인력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4년제 이공계 대학의 확충 및 현장기술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2년제 공업계 전문대학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전체 대학생수에서 이공계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25%에서 1979년에는 35%로 증가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해외 과학기술자의 국내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이 사업이 시작된 1968년부터 1979년까지 2백38명의 해외두뇌 영구유치를 이룩하였고, 2백55명의 일시유치 실적을 올렸다.

또 그동안 10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국가기술자격제도를 1975년부터는 통일되고 종합된 국가기술자격제도(1973년에 제정된 국가기술자격법 토대)로 탈바꿈하여 시행함으로써, 기술인력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고 이들이 사회에서 우대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국가 과학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구축의 한 방편으로 대규모 연구단지의 조성을 구상하였다. 기존의 KIST를 중심으로 한 서울연구개발단지에 이어 새로운 대단위 연구단지인 대덕연구단지에 대한 건설계획이 1973년에 수립되고 1974년부터 시행되었다. 이 단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대학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형성하는 세계적인 두뇌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70년대 후반부터 연구기관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정부는 또한 우리나라의 부진한 기초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1977년 한국과학재단을 발족시켜, 대학의 기초연구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1963년 이래 계속되어 온 문교부의 학술연구조성비 역시 대학의 기초연구를 꾸준히 지원하였다.

한편 정부는 1972년 기술개발촉진법을 제정하여 산업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기술개발준비금 적립제도가 정착하도록 하였다. 또 기술개발활동에 대한 조세, 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를 발굴하는 한편, 특허 및 표준화제도의 발전을 통하여 기술개발활동이 촉진되도록 유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70년대에는 기술도입에 대한 단계적인 자유화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선진기술들의 국내유입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80년대 국제경쟁력 확보에 초점

이외에도 정부는 국민과학화운동 등 과학기술포도조성사업들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리고 70년대에는 정부의 경제개발계획과 연계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1972~1976)과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1977~1981)이 마련되었다.

종합적으로 70년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정착하고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 공급하는 체제가 갖추어지는 데에 과학기술정책이 기여한 시기이었다.

80년대는 첨단산업구조로의 개편과 민간주도체제의 정착 그리고 대외개방 등 경제체질의 개선을 통한 국제경쟁

력의 확보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책은 기술드라이브정책의 기치아래 핵심전략기술의 개발,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 활성화, 국제화의 진전 등에 주력하였다. 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상공부, 체신부 등에서도 기술개발이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여 과학기술정책이 범부처적으로 확산되었다.

연구조직 측면에서 정부는 보다 효율적인 연구수행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목 아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을 80년대 초에 시행하였다. 또 정부가 민간 연구조직의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힘입어 기업부설연구소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1979년말 46개에 불과하던 기업부설연구소가 1988년에는 5백개, 그리고 1991년에는 1천개를 넘어서고 또 산업기술연구조합이 활성화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학의 연구조직도 활성화되는 가운데 80년대 말에는 국제수준의 연구집단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우수연구센터의 설립을 정부가 지원하여, 1992년 현재 전국에 우수과학연구센터(SRC) 14개소, 우수공학센터(ERC) 1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정부는 창조적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계속 발전시키고 과학영재를 조기에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1984년에는 과학기술대학(KIT)을 설립하였으며(현재는 한국과학기술원과 통합 운영), 1983년에는 과학고등학교를 설립하여(1993년 현재 전국에 13개), 과학고등학교→과학기술대학→한

국과학기술원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영재교육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산업기술인력의 기업 내 양성을 위한 사내기술대학(원)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 과학기술두뇌의 지속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 신진과학기술자의 해외연수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첨단분야에서의 전략적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1982년부터 특정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첨단기술개발의 국내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상공부는 1987년부터 공업 기반 기술 개발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여 산업계의 애로기술 개발을 지원하였고, 체신부를 중심으로 미래의 핵심기술인 정보기술의 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과학기술처는 60년대 이후부터 계속된 원자력분야에서의 자립기술 개발을 80년대에도 계속 추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70년대에 착수한 대덕연구단지의 지속적인 건설과 활성화를 추진하여 1992년에는 20년간의 대역사를 마무리하는 준공식을 가짐으로써, 연구교육기능과 첨단산업기능 및 문화환경기능이 조화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문화도시를 실현시켰다.

80년대에 정부는 또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세제 금융 정부구매제도의 개선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산업재산권 표준화제도 등 기술개발을 유인하는 제도들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다.

특히 1987년에는 무역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진국의 지적소유권 보호 압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국제라

운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면서 관련제도를 국제수준화하고자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선진기술의 국내 유입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70년대에 시작된 기술도입 자유화조치를 80년대에는 더욱 확대하였으며 특히 1984년에는 종래의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그 기본틀을 전환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는 바, 80년대 말에 이르러 소련 및 동구권과의 협력체제가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 외에도 정부는 청소년 및 일반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수용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풍토사업을 전개하였다. 특히 1990년 대덕연구단지에 이전한 현대적 국립중앙과학관은 개관 후 1년여 동안 약 1백만명이 관람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80년대에 이루어진 과학기술발전계획으로는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1982~1986)과 제6차 경제사회발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1987~1991), 제1차 기계류·부품·소재국산화 5개년계획(1987~1991) 등이 있었다. 특히 1986년에 수립된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에서는 2000년에 세계 10위권의 기술선진국을 구현함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종합적으로 80년대의 과학기술정책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활동이 활성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면서 연구개발조직, 정부의 지원제도, 기술개발의 내용 등에서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개발체제가 하나의 종합적인 틀을 갖추어 갔도록 하였다.

90년대 선진경제 달성 목표

90년대에는 우리경제의 성장력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확보 및 선진경제의 달성에 경제정책의 초점이 모아졌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도 과학기술 각 분야의 질적 고도화와 세계화의 진전을 기조로 하여 민간주도 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전략적 핵심기술의 개발, 과학기술 하부구조 강화, 지원제도의 선진화 등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통치권자에게 고도로 전문화된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시의적절한 전문적 정책자문을 행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1991년에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또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의지표명과 범국민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하의 과학기술진흥회의가 1993년까지 총 6회 개최되었다.

이 외에도 과학기술발전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종합과학기술심의회가 90년대에 들어와 다시 활성화되었으며, 또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는 부처가 기존의 과학기술처, 상공부, 체신부, 교육부 등에서 보건사회부, 농림수산부, 환경처 등으로 보다 다기화되어 과학기술정책은 이제 전부처적인 공통의 관심사항으로 부각되었다.

연구조직 육성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대학 등의 능력확충과 함께 이들간의 연계형성에 정책상의 비중을 두었다. 특히 대학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연구센터의 선정, 지원 및 연구자금의 지원 확대를 통하여 대학의 연구조직 육성에 힘썼다. 연구자원의 확충에서는 과학기술투자의 지속적인 확대가 80년대에 이어 주요한 정책목표였으며, 창조적 과학기술인력

의 양성도 80년대에 이어 계속되었다.

또한 정부는 보다 세분화된 형태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였는 바, 기존의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대체에너지 기술개발사업 등이 보다 목표지향적인 사업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1991년부터는 2000년대에 과학기술 선진7개국 수준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대형협동연구개발사업인 선도기술개발사업(G7프로젝트)을 출발시켜 미래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들도 80년대에 이어 계속 시행되었다. 이중에도 특히 행정규제의 완화 등 제도적 개선책을 도모하는 한편, 새로운 국제규범에 부응하기 위하여 세계, 금융, 정부구매, 산업재산권 등을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다. 또한 민간기업 연구개발활동의 세계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하면서, 선진국·개도국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과학기술외교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민간기업의 해외현지 연구개발거점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 북방국가들과의 과학기술협력이 크게 진전되었다.

한편 90년대 들어와 한국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과학기술발전계획들이 다발적으로 수립되었는 바, 대표적인 것들로는 과학 및 산업기술 발전계획(1990~1996),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중 과학기술부문계획(1992~1996), 과학기술혁신 종합대책(1992~2000), 신경계 5개년계획중 기술개발전략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제2차 기체류·부품·소재국산화 5개년계획

(1992~1996), 생산기술발전 5개년계획(1991~1995), 정보사회종합대책(1990~2000) 등이 있다.

또 최근에는 2010년을 향한 과학기술 발전 장기계획(1995~2010)작업이 진행된 바 있으며, 현재 2020년까지의 장기 국가발전의 비전을 설정하는 신경계 장기구상 작업이 진행중인 바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작업도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발전계획들중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것들도 있지만, 이러한 계획의 수립 그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를 적극적으로 개척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종합적으로 90년대의 과학기술 정책은 80년대에 추진되었던 주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모양이 갖추어진 우리나라 과학기술 하부부문의 질적 고도화와 국제 개방체제의 실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창조형 기술개발체제 전환을

한국 과학기술은 국가의 다른 부문에서와 마찬가지로 광복 당시의 개도국중 최말단의 위치로부터 현재는 개도국중 최선두의 위치에서 선진국에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만큼 단기간 내에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GNP 대비 연구개발투자가 2.3%(1993년 추정치)로 그 비율이 주요 선진국에 근접한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연구원수도 1993년 현재 10여만명으로 영국에 접근하고 있는 규모를 갖추었다.

또 과학기술개발 시스템의 구성구석에서도 비록 그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보완되어야 할 점들이 많지만, 주요한 요소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로 갖추게 되었다. 70년대의 정부출연연구

기관 육성, 80년대의 민간연구소 육성, 90년대의 대학연구 육성 등을 통하여 그 기본적인 틀은 이제 구축되었다. 그리고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도 다양하게 갖추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들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과학기술개발체제는 지난 50년이라는 커다란 한 사이클을 통하여 그 기본골격을 형성하는 한편 불충분하나마 주요 요소들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을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국의 과학기술개발 시스템이 완성된 모습을 갖춘 상대는 결코 아니며, 이제 겨우 그 형상만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향후 또 다른 장기간에 걸치는 커다란 제2의 사이클을 통하여 질적으로 알찬 모습을 구축해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과학기술정책도 종전과는 다른 시각과 내용을 가지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제까지의 개도국적인 정책마인드를 바탕으로 한 육성(Promotion)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과학기술개발체제 내의 각 구성요소들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미래지향형(Future-oriented)의 정책마인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특히 이제까지의 모방중심체제로부터 창조형 기술개발이 중심을 이루는 체제로의 전환, 이제까지의 제조기술 중심의 불균형적인 발전으로부터 취약부문이 치유되어 과학기술의 각 부문이 골고루 균형되게 발전한 모습의 실현, 그리고 선진국형의 완전한 민간기업 주도체제의 정착에 우선적으로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⑤7